



우유수급 해결방안 전문가에게 들어본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조석진
영남대학교 농과대학 교수

UR 이후 개방경제체제로의 이행에 따른 시장여건의 급변에도 불구하고 생산자와 유업체가 새로운 시장여건에 적응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있어서 상호 협조보다는 대립으로 일관해 왔기 때문이다.

그 결과 진흥회의 원유수급조절 기능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으며, 시장의 수급실세를 반영할 수 있는 유가조절도 어려운 상황이다.

1995년 WTO 체제의 출범에 따라 국내유제품시장은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되었다. 아울러 국내낙농은 사실상 시유생산에 국한되게 되었으며, 그 같은 시장구조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그 같은 시장의 변화 속에서 최근 안정된 원유가격 및 생산성향상에 힘입어 시유수요를 훨씬 초과하는 원유생산이 지속됨에 따라 구조적인 수급불균형현상이 장기화되고 있다. 이는 다양한 요인에 기인하나 무엇보다 불합리한 낙농관련 제도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즉 현행 제도 하에서는 낙농가는 증산의욕을 억제하기 어려우며, 유업체와 식품업체의 유제품수입 또한 막을 길이 없다. 그 같은 의미에서 낙농산업이 직면한 오늘의 문제는 현 제도 하에서 공급자와 수요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결과 나타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 제도가 지속되는 한 수급균형유지를 위한 낙농가와 관련 업체의 자제심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왜 국내의 낙농산업이 최근과 같이 심각한 원유의 수급불균형에도 불구하고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가 하는 점이다. 이는 무엇보다 UR 이후 개방경제체제로의 이행에 따른 시장여건의 급변에도 불구하고 생산자와 유업체가 새로운 시장여건에 적응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있어서 상호 협조보다는 대립으로 일관해 왔기 때문이다. 그 결과 진흥회의 원유수급조절기능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으며, 시장의 수급실세를 반영할 수 있는 유가조절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 같은 의미에서 오늘의 수급불균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낙농산업의 두 축이라 할 수 있는 생산자와 유업체의 고통분담을 통한 협조체계 구축이 절실하다. 아울러 양자는 낙농 현실에 대한 정확한 사실인식을 바탕으로 필요한 제도개선에 적극 동참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국제화시대에 어느 한 쪽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거나 불



의
연간 1
인당 우유

소비량(65kg) 및

시유소비량(34kg)이 2001

년 현재 국내의 1인당 우유소비량
(64kg) 및 시유소비량(36kg)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었다.

이는 어떤 의미에서 쌀을 주식
으로 하는 한·일 양국의 식생활
에 있어서 공통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즉 연간 1인당 시유소
비가 40kg에 육박하면서 소비둔
화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일본이 지난 20년 간('80~'00)
1인당 시유소비가 34kg에서
39kg으로 증가해 연평균 0.7%
의 증가를 보인 반면, 유제품소
비는 31kg에서 55kg으로 증가
해 연평균 2.9%의 증가율을 나
타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할 때 금후
국내의 우유소비도 점차 치즈를
포함하는 고급유제품을 중심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금후 소
비증가가 예상되는 유제품의 대
부분은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
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는 재론할 필요 없이 UR 협

상에서 한국은 일본을 포함한 낙
농선진국과 달리 유제품수입을 억
제할 수 있는 확고한 국경조치를
확보하는 데에 실패했기 때문이
다. 그 결과 국산유제품시장이 성
립되지 않아 국내 낙농은 사실상
시유생산에 국한되고 있으며, 수
급균형유지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내 낙농이
금후 안정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
는 무엇보다 원유의 수급균형유지
와 함께 시유소비확대 및 경쟁력
있는 국산유제품의 개발이 절실하
다. 그 경우 수급안정을 위해서는
생산조절, 소비확대, 수입억제 등
의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이들 세 가지 방법 중 생산조절
을 제외한 소비확대나 수입억제
는 생산자 스스로의 능동적인 의
지에 의해 달성되기 어렵다. 따라
서 결국은 생산조절을 통한 수급
균형유지가 불가피하며, 이를 위
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쿼터제
이다. 그 같은 이유로 미국을 제
외한 EU, 캐나다, 일본 등 모든
낙농선진국이 쿼터제를 통한 계
획생산체제로 이행한지 오래다.

이는 쿼터제가 지난 시장왜곡
적인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효율
적인 생산조절이 가능하기 때문
이다. 이와 관련하여 1984년 쿼
터제를 도입한 EU는 쿼터제 도
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
하고 있다.

“원유의 수급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가능한 방법들에 대해 면밀

리한 시장구조는 지속될 수 없기
때문이다. 농림부 또한 이 같은
양자의 자구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책지원 및 새로운 시장환
경에 적응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한다.

한편 현재의 소비자중심 시장구
조를 감안하여 원유수급불균형의
수요측 요인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최근 시유소비가 부진한 주
요 요인의 하나는 대체재라 할 수
있는 두유, 기능성음료 및 과일쥬
스 등과의 경쟁에서 시유가 열세
에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이들
대체재는 연평균 20%를 상회하
는 매출증가를 나타내고 있는데
비해 시유소비는 둔화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1980년 일본이
원유의 수급불균형에 직면했을 당시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 즉 대체
재의 소비증가에 따른 시유소비감
소 및 원유수급불균형의 심화가
그것이다. 그뿐 아니라 당시 일본



히 검토한 결과 제도실시에 따른 행정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가장 효율적이며, 낙농가의 소득에 가장 영향이 적은 방법은 쿼터제를 실시하는 것이며, 아울러 쿼터를 초과하는 생산량에 대해 과정금을 부과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쿼터제의 도입을 위해 서는 상당한 준비기간을 필요로 한다. 그 같은 의미에서 과도기적인 수급조절방안의 도입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되도록 빠른 시일 안에 쿼터제로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과도기적인 수급조절을 위해 어떤 방법을 도입하든 궁극적으로 생산조절이 공평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에 따른 농가별 생산량배분이 불가피 하기 때문이다. 이는 곧 개별쿼터의 설정을 통한 쿼터제로의 이행을 의미한다.

한편 쿼터제의 실시와 관련하여 쿼터제가 지니는 시장왜곡적인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보완책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첫째, 쿼터의 매매를 허용하는 문제이다. 이는 쿼터매매를 통해 생산성이 높은 농가가 보다 많은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국제화시대에 국내 낙농의 경쟁력강화라는 측면에서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신규참여 및 영세농가의 규모확대를 위한 배려문제이다.

이는 후계자문제와도 관련되며, 낙농산업에 젊고 유능한 인재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둔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쿼터제실시에 있어서 이들을 위한 배려가 필요하다.

셋째, 쿼터를 농지와 연계시키는 문제이다. 낙농은 본래 토지이 용형농업이다. 이는 농지(土)-목초(草)-소(乳牛)로 이어지는 생산과정에서 얻어지는 우유를 인간이 소비하고, 배출되는 가축분뇨는 다시 농지로 환원되는 물질순환형 농업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급사료기반을 바탕으로 하는 환경친화적 낙농이 중심을 이루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

〈필자연락처 : 053-810-2962〉

생석회 · 소석회

- 산성폐수 및 오수정화
- 축산소독 및 약취제거
- 충란 및 병원균 살균
- 유기질 분해촉진
- 산성 토양 개량(PH 안정)

영월석회공업사

TEL : (033)372-5837, 5618, 5296, 6878
FAX : (033)372-5889
야간 : (033)372-5293